



## 법과 정치

### 1. 사회 계약론

정답 ⑤

⑤ '직접 민주 정치를 이상적 정치 형태로 보았는가?'는 루소에게만 '예'에 해당하는 구분 기준이므로 (다)에 들어갈 수 있다. ① 홉스와 달리 로크와 루소는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였다. (가)에는 세 사람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구분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② (나)에는 두 사람은 '예'에 해당하고, 한 사람은 '아니오'에 해당하는 구분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국가가 수단적 존재라고 보았는가?'는 세 사람 모두 '예'에 해당하는 구분 내용이다. ③ '자연권을 국가 내적 권리로 보았는가?'는 세 사람 모두 '아니오'에 해당하는 구분 내용이다. ④ 홉스와 로크, 루소 모두 재산권의 보장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았다.

### 2. 주요 헌법 기관의 권한

정답 ③

A는 대통령, B는 국무총리, C는 대법원, D는 국회, E는 헌법 재판소이다. ③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 재판소 소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 동의를 필요하나, 헌법 재판관의 임명에는 국회 동의를 필요하지 않다.

### 3. 헌법 재판의 의의

정답 ④

ㄱ. 위헌 법률 심판 제도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치이다. ㄴ.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헌법이 최고 규범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ㄷ. '과도하게 제한'이라는 표현을 통해 해당 법률 조항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됨을 알 수 있다. ㄹ. 자유권은 국가 이전의 권리, 즉 천부 인권에 해당한다.

### 4. 정치 참여 주체의 구분

정답 ③

정당과 시민 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A는 이익 집단이다. ③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 모두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지역 대표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다. A가 이익 집단이므로 B가 시민 단체이든 아니든 옳지 않은 진술이다. ① 정당과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② (나)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가 들어가면 B는 시민 단체, C는 정당이 된다. ④ B가 시민 단체라면 C는 정당이다. 정당은 각종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여 대표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⑤ (나)에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가?'가 들어가면 B는 시민 단체가 된다.

### 5. 선거 제도의 이해와 결과 분석

정답 ①

ㄱ. 득표율과 의석수 표를 비교하면, D당의 경우 비례 대표 선거에서 2%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음에도 의석은 한 석도 배분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비례 대표 배분에서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ㄴ. A당과 B당 모두 지역구 선거 득표율보다 의석 점유율이 높다. 즉 A당과 B당 지지 유권자들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었다. ㄷ. 지역구 선거에서 C당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에서도 C당을 지지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ㄹ. 동일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선거구 제도는 중대 선거구제이다. 갑국의 지역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제이다.

### 6. 대통령제와 여소야대

정답 ②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고,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국민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ㄱ.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을 점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36석의 의석을 가진 C당이 의회 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ㄷ. 여소야대 정국이 출현할 경우 의회 권력을 장악한 야당

과 행정부가 충돌하여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ㄴ. 내각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견제하는 수단이다. ㄹ. 과반수 정당이 없으므로 여소야대 상황이다. 야당이 입법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7. 불법 행위 책임

정답 ④

④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포함된다. ① (가)는 동물의 점유자 책임에 해당하는 특수 불법 행위 사례이고, (나)는 일반 불법 행위 사례이다. ② (가), (나) 모두 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는 사례이다. ③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⑤ (가)에서 을은 소유주 불법이 인정되면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 8. 연소자 근로 보호

정답 ⑤

병.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유해중점이나 소주방 등 유해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 갑, 정.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가 금지되며, 15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일하려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 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고, 미성년자가 직접 맺어야 한다. 을. 연소 근로자도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최저 임금을 똑같이 적용받는다.

### 9. 국제 사회를 보는 현실주의적 관점

정답 ④

제시문에 나타난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은 현실주의이다. ㄴ. 현실주의는 국제 정치를 권력 투쟁으로 봄으로써, 복잡한 국제 관계를 권력 관계로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ㄷ. 현실주의는 자국 안보와 국제 평화를 위해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 하고, 동맹 등을 통해 세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ㄱ. 자유주의의 관점이다. ㄹ. 현실주의가 국가를 가장 중요한 국제 행위 주체로 보는 것은 맞지만, 국가가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 10. 형사 절차

정답 ①

①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무죄 선고를 받은 갑과 집행 유예 선고를 받은 정은 모두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었다. ③ 을과 병 모두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형사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④ 가석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⑤ 갑과 을은 무죄가 인정되었지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병은 무죄가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11. 동시 사망의 상속

정답 ②

ㄱ. 갑과 병의 사망 순서와 상관없이 무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ㄷ. 갑이 병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을과 직계 비속인 병, 정이 각각 1.5:1.1의 비율로 상속을 받는다. 그리고 병도 사망하였으므로 병이 상속받은 갑의 재산은 다시 병의 직계 존속인 을이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최종 상속액은 을이 정 2.5배이다. ㄴ. 갑이 먼저 사망한 경우, 병은 정과 같은 금액의 상속을 받게 된다. 이후 병이 상속받은 재산은 직계 존속인 을에게 모두 상속된다. ㄹ. 병이 갑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갑의 재산은 을과 정이 1.5: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정 2.5배이다. ㄹ. 병이 갑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갑의 재산은 을과 정이 1.5: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정 2.5배이다.

### 12. 법률혼과 사실혼의 비교

정답 ③

(가)는 법률혼, (나)는 사실혼이다. ③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유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다. ②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간에 동거, 협조, 부양, 정조의 의무가 발생하며, 일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된다. ④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경우 생존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사실혼도 혼인 관계 해소 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 13. 헌법의 기본 원리

정답 ②

A는 문화 국가의 원리, B는 국민 주권의 원리이다. ㄱ. 문화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생 교육 진흥, 의무 교육 제도 실시, 종교·학문·예술의 자유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ㄷ.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은 국민 주권주의의 근거 조항으로 볼 수 있다.

### 14. 기본권의 역사적 발전 과정

정답 ④

(가)의 '국가에 의한 자유', (나)의 '국가로부터의 자유', (다)의 '국가에 의한 자유'는 각각 국민의 기본권인 사회권, 자유권, 참정권을 의미한다. ① 자유권, ②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다. ③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⑤ 자유권 → 참정권 → 사회권의 순으로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 15. 민주 선거의 원칙

정답 ④

제시문에서 국가 인권 위원회는 유권자가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게끔 비밀을 보장하는 비밀 선거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 16. 민사 분쟁의 해결 방안

정답 ③

③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① 소액 사건 심판 제도는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활용할 수 있다. ② 민사 소송은 개인 간의 다툼을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강제적인 방법이다. ④ 내용 증명 우편은 우편의 발송 사실을 입증한다.

### 17. 행정 구제 제도

정답 ①

A는 행정상 손해 배상, B는 행정상 손실 보상이다. ㄱ. 행정상 손해 배상의 종류에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 행위로 인한 배상과 공공시설(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두 가지가 있다. ㄴ. 행정상 손실 보상에서는 재산권 침해 이전의 생활 상태로 보상해야 하며,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까지도 인정될 수 있다. ㄷ. 행정상 손해 배상과 행정상 손실 보상 모두 사후적 구제 수단에 해당한다. ㄹ. 행정상 손해 배상과 행정상 손실 보상 모두 금전적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 18. 근대 민법 원칙의 수정

정답 ①

제시된 두 약관 모두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즉, 계약 공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있어서의 신의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에 부합한다. ② 계약 자유의 원칙, ③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④ 소유권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⑤ 무과실 책임주의에 대한 진술이다.

### 19. 법적 사례의 분석

정답 ⑤

대법원 판결은 K씨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 20. 범죄의 성립 요건

정답 ③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충족해야 한다. 1, 2심 재판부는 의사가 수혈을 하지 않은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